

국가안정망 세미나

- 일 시 : 2016. 2. 1(월), 15:0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국가안정망 세미나 계획

- ◆ 지역주민의 안정된 삶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사회안정망에 대한 지역의 이해 도모
- ◆ 국가안정망의 향후 개선·보완점을 지역의 관점에서 조명

■ 개요

- 때·곳 : 2016. 2. 1(월) 15:00~17:00/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분야별 전문가, 충남도청 관련 공무원, 충남연 연구원
 - 발표자
 - 국민연금 : 우해봉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산재보험 : 형희환 부장(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재활보상부장)
 - 고용보험 : 최석현 박사(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건강보험 : 서남규 박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내 용 : 4대 보험·연금별 제도적·법적 개선 및 보완 방향

■ 진행 계획

시간	내용	비고
15:00~15: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충남연구원
15:10~15:30	국민연금	우해봉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30~15:50	산재보험	형희환 부장(근로복지공단)
15:50~16:10	고용보험	최석현 박사(경기연구원)
16:10~16:30	건강보험	서남규 박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
16:30~16:5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6:50~17:00	마무리	사회자
17:00~	저녁식사	참석자 전원

목 차

I.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

II. 산재보험의 현황과 동향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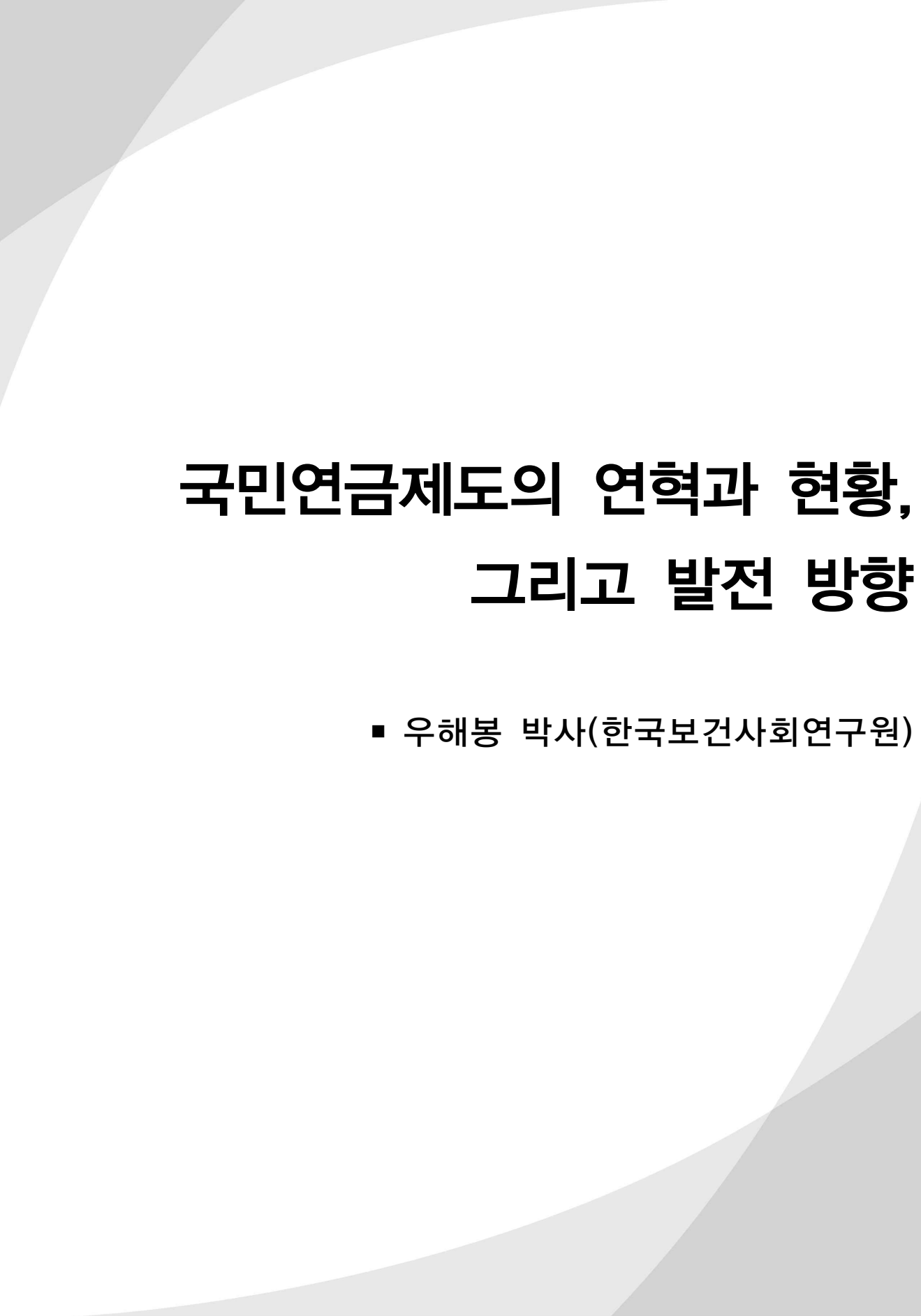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형희환 부장)

III.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27

(경기연구원, 최석현 박사)

IV. 국민건강보험제도41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박사)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 우해봉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2016년 2월

I.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1. 도입 및 확대

사회경제적 여건 성숙

-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부담능력 향상
- 8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 본격화

1988 국민연금제도 시행

-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 18~59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1970년대

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74년 1월 시행 예정
- 1973년 말 제1차 석유파동, 경제불황 등으로 제도 시행 무기한 보류
- 선(先) 연금보험, 후(後) 의료보험 정책
→ 선(先) 의료보험, 후(後) 연금보험으로 선회

1980년대

1990년대

1992 사업장 가입자 적용범위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1995 농어촌 지역 확대

-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 가속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농어촌 대상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1999.4 도시 지역 확대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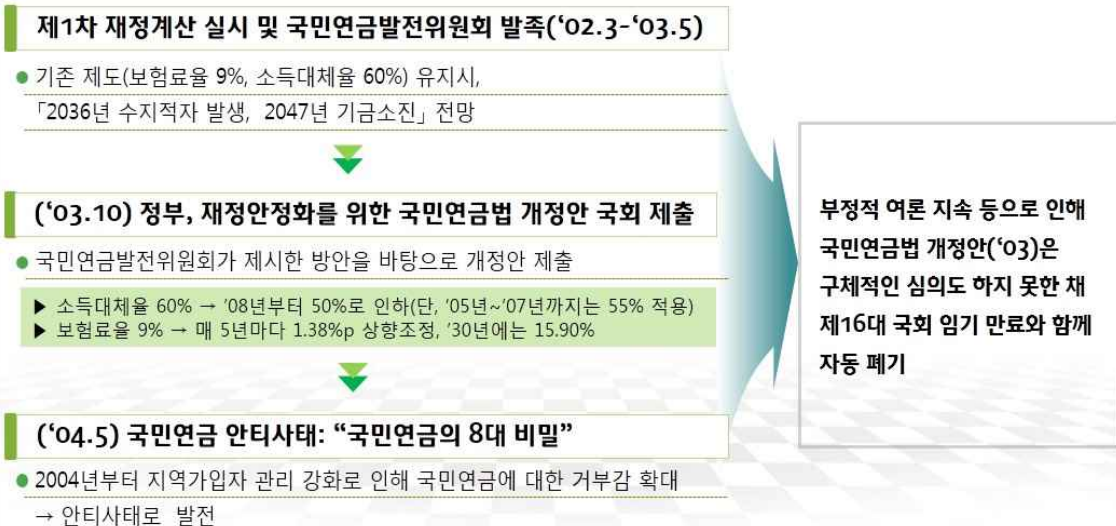
2. 제1차 제도 개혁('98) ▶ 전국민연금시대 도래('99.4)



3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제2차 국민연금 개혁('07)



4

I.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제2차 국민연금 개혁('07)

('04년 말) 한나라당, 기초연금법안 제출

- 현 세대 노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부재 비판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제시
 - ▶ 기초연금(A값, 급여율 20%, 재원: 조세), 소득비례연금(B값, 급여율 20%)



('06.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제시

-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제고
 - ▶ 국민연금 급여수준 : 60% → 40%('09~'28년) 인하
 - ▶ 보험료율 9% → 12.9%(2017년) 인상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 기초노령연금 도입: 65세 이상 노인의 45% 대상, 월 8만원 지급



('07.3) 국민연금법 개정(안) & 기초노령연금법(안) 제출

- ▶ 정부·열린우리당 안(법사위 통과 안)과 한나라당·민노당 안(본회의 수정안) 대립
- ▶ 기초노령연금법(안) : 노인의 60% 대상, 국민연금 A값의 5% 지급

('07.4)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기초노령연금법(안) 통과

5

I.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제2차 국민연금 개혁('07)

('07.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안 발표

-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자,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 국회를 비난하며 조속한 재논의 요구
- 합의안 주요 내용
 - ▶ 국민연금
 - 급여율 : 60%→50%('08)→40%('28), '09년부터 매년 0.5%pt 인하
 - 보험료율 : 현행 9% 유지
 - ▶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 국민연금 A값 5%('08) →10%('28)



('07.7) 제2차 국민연금 개혁

-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제고
 - ▶ 급여율 인하 : 60%('07) → 50%('08) → 40%('28) 인하
 - ▶ 보험료율 9% 현행 유지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 대상자 확대(전체 노인의 60%→70%), 연금액 인상(국민연금 A값 5%('08) →10%('28))
 - ▶ 크레딧(출산, 군복무) 제도 도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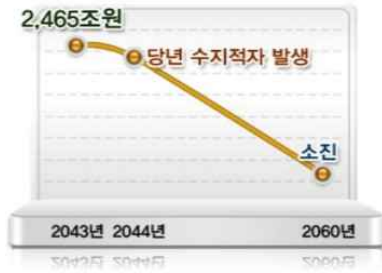
I.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제2차, 제3차 재정계산

('08) 제2차 재정계산

● '07년 제도개혁 영향

- ▶ 2044년 수지적자 발생
- ▶ 기금소진 : 2047년→2060년 (13년 연장)



- 추가적인 재정안정화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13)에서 검토

('13) 제3차 재정계산

● 재정계산 결과

- ▶ 2043년까지 적립금 증가(최대 2,561조원)
- ▶ 2044년 수지적자 발생, 2060년 기금소진

» 제2차 재정계산과 수지적자 발생 및 기금소진 시점이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은 조금 큰 것으로 전망

- 제2차 재정계산('08)시, 제3차 재정계산으로 위임했던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제1안) 부분적립방식 유지(보험료를 조속히 인상)

(제2안) 부과방식으로의 연착륙(보험료를 당분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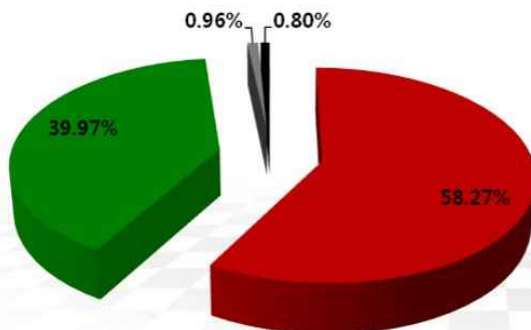
7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 및 적용 사각지대 현황

가입자 현황 ('14.12월 말 기준)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2014.12월 말 기준 가입자 21,125천 명

사업장가입자 12,310천 명

지역가입자 8,445천 명

임의가입자 203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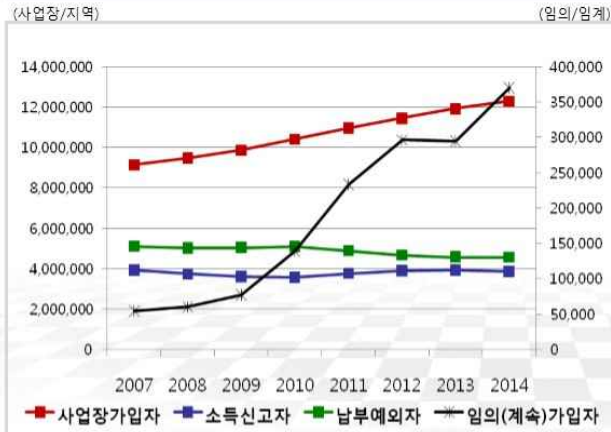
임의계속가입자 168천 명

8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 및 적용 사각지대 현황

연도별 가입자 현황



가입자 규모의 지속적 증가

2007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규모가
지역가입자 추월

2009년을 기점으로,
임의가입자 급증

9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 및 적용 사각지대 현황

공적연금 적용 현황 ('14.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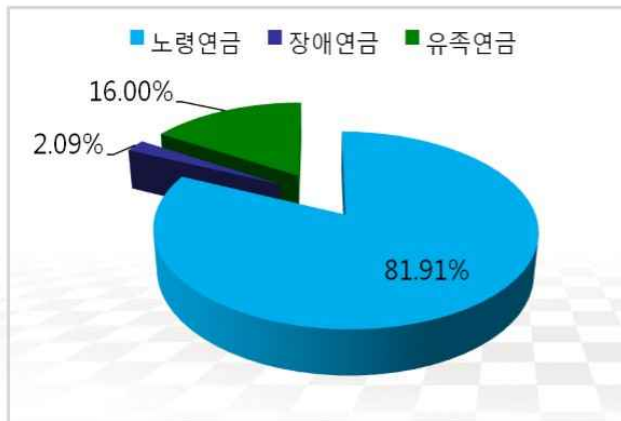
18~59세 총인구(32,994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10,123천 명)	경제활동인구(22,871천 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470천 명)	공적연금 적용자(22,401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20,957천 명)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444천 명)
		납부예외자 (4,571천 명)	소득신고자(16,386천 명)		
			장기 체납자 (1,138천 명)	보험료 납부자 (15,248천 명)	
30.70%	1.40%	13.90%	3.40%	46.20%	4.40%
소계(16,302천 명)				소계(16,692천 명)	

10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수급 현황 및 전망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14.12월 말 기준)



2014.12월 말 기준 수급자 3,599천 명

노령연금 2,947천 명

장애연금 75천 명

유족연금 576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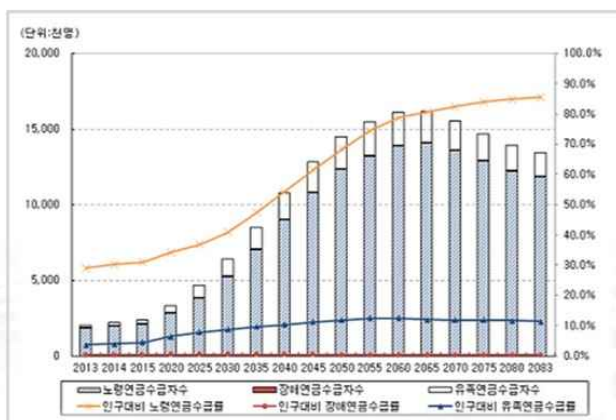
11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수급 현황 및 전망

연금 수급자 전망

-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



노령연금 수급자
(2083년) 85.4% 수준
도달

장애연금 수급자
점차 증가(0.2%→0.4%)
(2065년) 이후 0.2%유지

유족연금 수급자
(2055년) 12.5% 도달
이후 점차 감소

12

Ⅲ.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1.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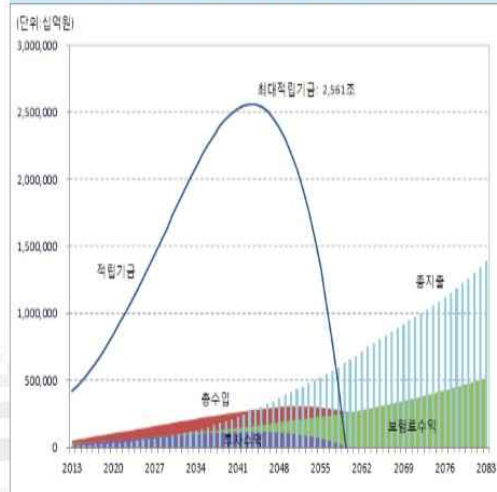
합계출산율(223개국, 2012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제3차 재정계산 결과 : 재정수지 전망



인구고령화와 재정불안정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대두

13

Ⅲ.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2. 발전 방향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 소득 파악 기반 확충 : EITC 연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 취약 근로계층 가입 제고 : 두루누리, 실업크레딧 등
-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 출산크레딧, 파생수급권, (이혼)소득분할 등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공·사적 연금제도 간 관계 정립
 -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 기초연금 정착 및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
 - 사적연금(퇴직연금) :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대책('14.8.) 등

● 노후소득수준 적절성 모색

- 급여수준 감소에 대한 대응 필요
- 고령근로 친화적 급여제도 모색

14

(참고) 주요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1주	1층	SSI	Pension Credit	-	GIS	기초연금 (AP)	기초연금
			기초연금 (BSP)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OAS)		
	2층	OASDI	소득비례연금 (S2P)	소득비례연금 (후생연금)	소득비례연금 CPP(QPP)	-	국민연금
2주	2층	(임의가입) 퇴직연금				(강제가입) 퇴직연금	(강제가입) 퇴직(연)금
3주	3층	(임의가입) 개인연금 + 세제우대 개인저축					

15

THANK YOU!

Q & A



산재보험의 현황과 동향

- 형희환 부장(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산재보험의 현황과 동향

2016. 2. 1.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재활보상부장
형희환 heehwan@kcomwel

발표 순서

- I. 근로복지공단 소개**
- II. 산재보험제도 개요**
- III. 산재보험 적용·부과 기준 및 현황**
- IV. 산재보험 보상 기준 및 현황**
- V.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I . 근로복지공단 소개 (1)

1. 설립 근거와 목적 등

근거는?

• 산재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은?

• 산재보험, 근로자복지 사업의 효율적 수행

성격은?

•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 1995.5.1.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산재보험사업 수행

3

I . 근로복지공단 소개 (2)

2. 주요 연혁

'95.5.1

• 공단 설립,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사업 수행

'98.7.1

• 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체불임금 등 지급)

'99.10.1

• 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위탁수행

'10.4.28

• 한국산재의료원 통합(10개 병원)

'11.1.1

•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 이관(건강보험공단)

4

I. 근로복지공단 소개 (3)

3. 조직 및 인력

조 직	공단 본부	소속기관
	❖이사장, 감사, 4이사	❖6지역본부 50지사
	❖3본부 9실국	❖6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산재보험심사위원회	❖10병원, 1연구소
	❖1연구원, 1연구소	❖3고객센터

인력 (정원)	합계	공단 본부	소속기관
	5,473명	508명	4,695명

5

II. 산재보험제도 개요 (1)

1. 도입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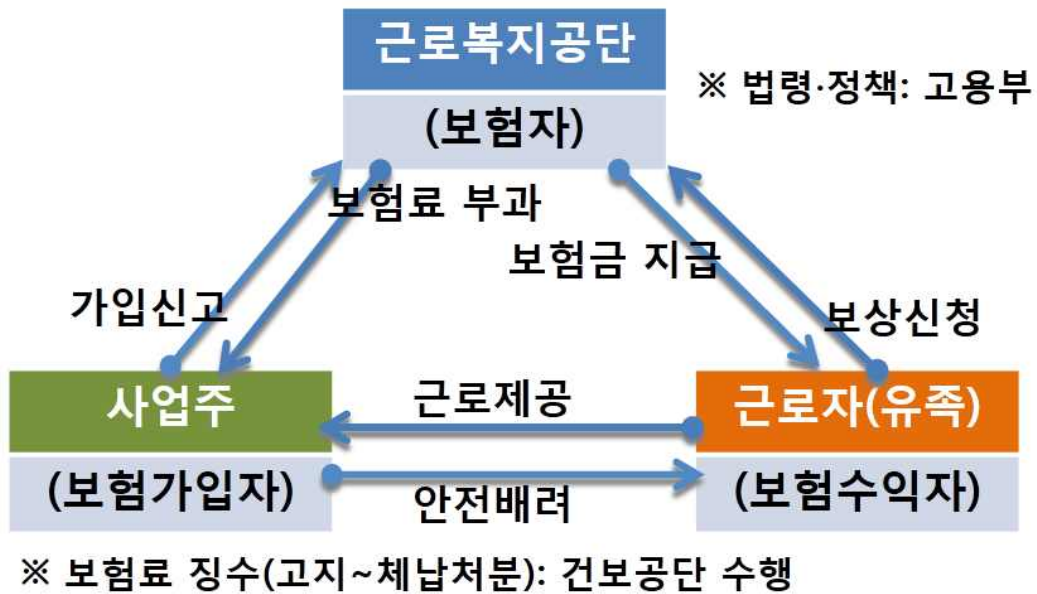
2. 도입 목적은? ➡ 근로자 보호!!

- WHAT?** 업무상 재해로부터
- HOW?**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할 및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6

Ⅱ. 산재보험제도 개요 (2)

3. 산재보험관계의 당사자는?



7

Ⅱ. 산재보험제도 개요 (3)

4.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은?

- (1) **책임보험**: 사업주의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
→ So, 근기법의 특별법,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 부담
- (2) **무과실책임**: 사업주의 과실 여부 불문
→ Also, 근로자 과실 여부도 불문(예외: 자해·고의·범죄)
- (3) **강제보험**: 사업주 의사·가입과 상관없이 적용
→ So, 사업주가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는 보호
- (4) **법정보상**: 신속·공정한 (정률)보상
- (5) **독립된 심사기구**: 행정심판과 별도 절차

8

Ⅲ. 산재보험 적용·부과 기준 및 현황 (1)

0. 적용·부과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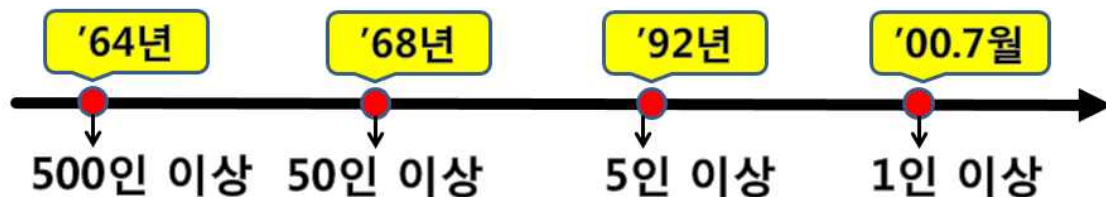
1-1. 적용 사업장 유형과 대상은?

당연적용	❖ (일반) 1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자) 모든 건설공사 ❖ (非건설업자)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 초과
임의적용	❖ 위 당연적용 비해당 사업(가입신청시 적용)
적용제외	❖ 공무원연금·선원법 등, 5인 미만 개인농업 등

9

Ⅲ. 산재보험 적용·부과 기준 및 현황 (2)

1-2. 적용 사업장 확대 과정



1-3. 사업주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 (1) **보험급여 징수**: 1년간 지급한 보험금의 50%
- (2) **보험료 추징**: 3년간 미납부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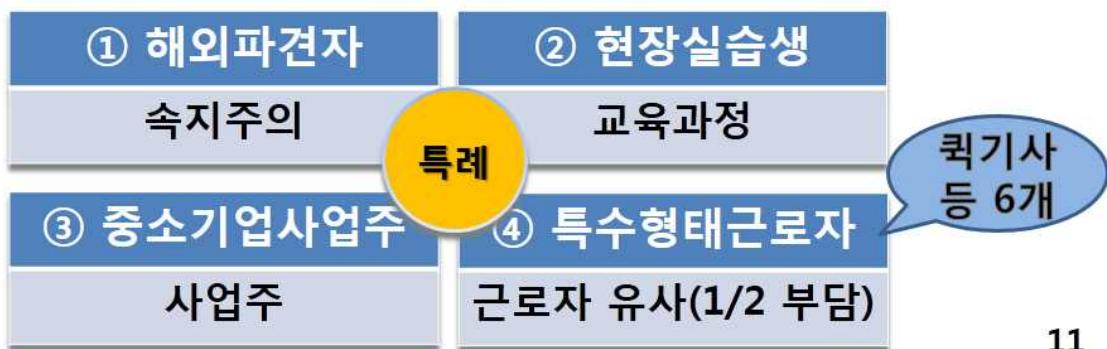
10

Ⅲ. 산재보험 적용·부과 기준 및 현황 (3)

2-1. 적용 대상 근로자: 근기법상 모든 근로자

- (1) 직업종류·계약형식·고용형태·정규직·국적 불문
- (2) 임금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2. 적용 특례: 非근로자, 보호 필요, 가입신청



11

Ⅲ. 산재보험 적용·부과 기준 및 현황 (4)

3-1. 보험료 부과 기준

산식 보험료율(일반+개별+예방) X 보수(임금)총액

- ※ **일반요율**: 매년 58개 업종별 고시(0.7%~34.0%)
- ※ **개별요율**: 실적에 따라 50% 범위 할인 or 할증(10인 ↑)
- ※ **예방요율**: 산재예방노력에 따라 30% 범위 할인(50인 ↓)

3-2. 보험료 부과(납부) 방법

- (1) **공단 월별 부과(납부)**: 일반 사업장 (고지 이후: 건보)
- (2) **자진신고(납부)**: 건설공사 사업장(일시납 or 4분할납)

12

Ⅲ. 산재보험 적용·부과 기준 및 현황 (5)

4. 적용 사업장·근로자 및 보험재정 현황



Ⅳ. 산재보험 보상 기준 및 현황 (1)

0. 산재보상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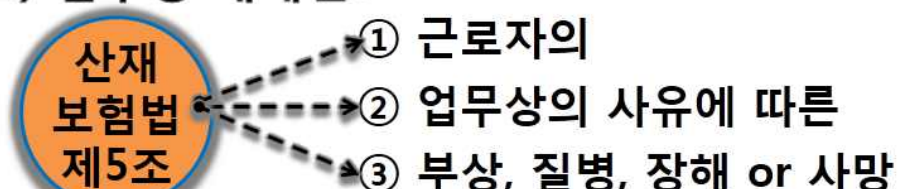


※ 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불복: 심사→재심사→소송

1. 업무상 재해의 의의·요건, 유형

(1) 업무상 재해란?



IV. 산재보험 보상 기준 및 현황 (2)

(2) 업무상 재해의 유형은?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① 업무수행중 사고	① 업무수행중 유해·위험 요인 취급 or 노출
② 시설결함 등 사고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출퇴근 사고(▲)	③ 기타 업무 관련 질병
④ 행사중 사고	
⑤ 요양중 사고	
⑥ 제3자 행위 사고	

15

IV. 산재보험 보상 기준 및 현황 (3)

2. 보험급여의 종류·내용과 산정

구분	내용	산정
요양급여	진료, 약제, 간병, 이송	요양급여산정기준 고시
휴업급여	요양기간중 생활보장	평균임금 X 70% X 일수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손실보상	일시금: 55~1,474일분 연금: 138~329일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비용	1일 27,450~41,170원
재활급여	원직장복귀 지원금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월 30~60만원(1년) 등 훈련비(600만원)+수당
유족·장의	사망시 유족보상, 장례	연금: 365일 X 52~67% 일시금: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

IV. 산재보험 보상 기준 및 현황 (4)

3.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참고사항

(1) 보험급여 산정기준 → 평균임금

✓ 평균임금: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2) 소멸시효 → 3년

(3) 수급권 보호 → 퇴직시?, 양도·압류·담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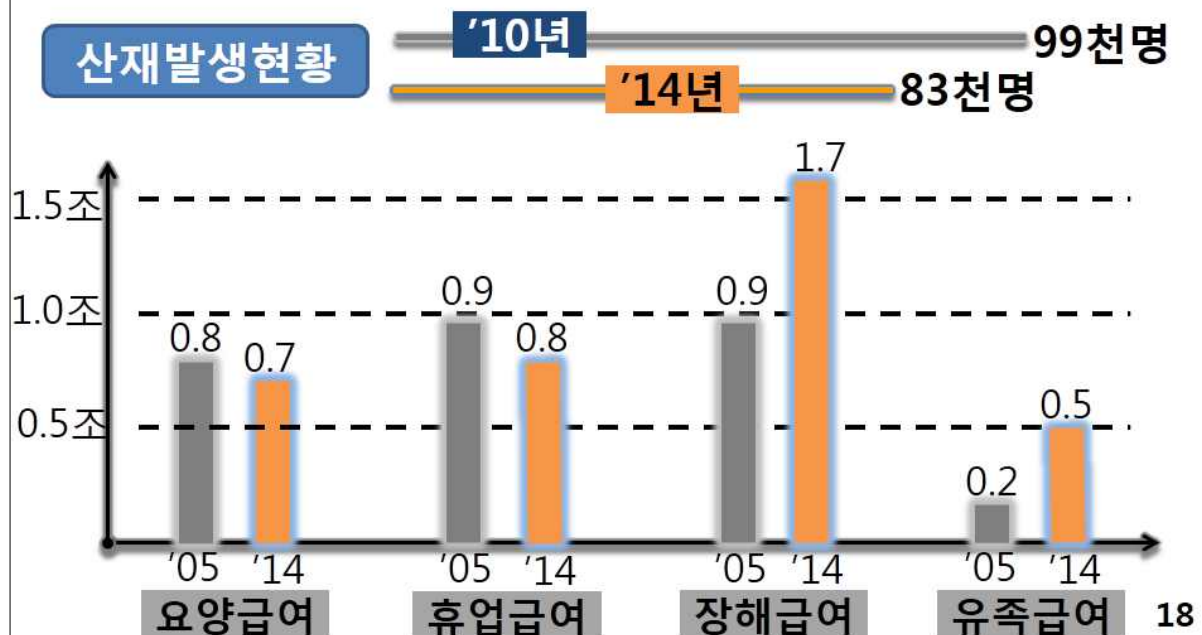
(4) 민사배상 등 조정 → 이미 받은 금액과 공제·조정

(5) 부당이득환수 → (단순착오) 원액
→ (고의허위) 배액

17

IV. 산재보험 보상 기준 및 현황 (5)

4. 보험급여 지급현황



18

V.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1)

1. 보험사각지대 - 적용 사업장 범위

(1) 적용 제외 사업장 범위 (법 제2조 제1항

- ❖ (1~2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선원법 등
- ❖ (3호) 非건설업자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공사
- ❖ (4호) 가구내 활동
- ❖ (5호) 5인 미만 非법인 농·림·어·수렵업

(2) 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 (논의대상) 위 제2호 및 제5호 사업
- ❖ (문제의식) 위험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보호 필요성 대두
- ❖ (장애요인) 관리체계 부족, 행정력 과다 소요

19

V.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2)

2. 보험사각지대 - 적용 근로자

(1) 논의배경: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필요성

(2) 현행제도: '0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도입

- ❖ (대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6개 직종
- ❖ (내용) 종사자 적용제외·재적용, 보험료 각자 1/2 부담

(3) 문제점→가입률이 9.8%로 저조, 실효성 의문제기

(4) 최근 동향

- ❖ 적용제외제한 법안 계류,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확대
- ❖ 배달App(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 청소년 보호 논의

20

V.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3)

3. 보장성 강화 필요

(1)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논의

- ❖ (현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만 보상
- ❖ (보호방안) '15.9월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 ❖ (주요내용) '17년 도보·대중교통→'20년 전면확대, 사업주 보험료 전액 부담, 근로자 중과실시 급여 일부 제한

(2)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 ❖ (배경) 아파트경비원자살, 백화점 진상고객→보호 필요
- ❖ (보호방안) '15년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주요내용) 인정기준에 적응장애, 우울병에피소드 추가

21

V.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4)

4.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1) 현행: 산재예방노력 유인을 위해 개별요율 운영

- ❖ (내용)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 인상 인하(10인이상)

(2) 문제점: 국회 등에서 산재은폐야기 등 문제 제기

- ❖ 또한 할인액 1.2조원 중 약 50%가 대기업에 집중

(3) 최근 동향

- ❖ '15년 노사 논의 진행, But 상호간 입장 대립
- ❖ 효과성·대기업 편중 등 연구용역, 노사정 논의 예상

22

V.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5)

5. 낮은 직업복귀율

(1) 현행: 산재요양종결 이후 직업·사회 복귀 지원

- ❖ (재취업 직업훈련지원) 비용 6백만원, 수당: 최저임금
- ❖ (원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에게 360~720만원 지급(연)

(2) 문제점: 직업복귀율 50% 원직장복귀율 40% 저조

(3) 최근 동향: 대체인력인건비지원 도입

- ❖ (개요) 요양종 대체인력 사용후 원직복귀시 사업주 지원
- ❖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개월 이상 요양 or 장해
- ❖ (지원)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23

V.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6)

6. 산재기금 재정 안정화

(1) 현황: 장해·유족 연금 지속 증가

- ❖ 연금액: ('08년) 1조9백억→('14년) 1조71백억 (57% ↑)
- ❖ 연금비중: ('08년) 32%→('14년) 44% (12%p ↑)

(2) 문제점: 세대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야기

- ❖ (원인) 법정책임준비금 적립기준, 보험료부과방식 등이 미래 연금부채 미반영

(3) 최근 동향: 대체인력인건비지원 도입

- ❖ 연금부채 일정비율의 책임준비금 적립 방안 등 논의
- ❖ 향후 연구용역, 노사전문가 논의, 법령개정 예상

24

감사합니다.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 최석현 박사(경기연구원)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6. 2

최석현

발표 순서

1. 고용보험제도개요
2. 고용보험제도 특징
3. 고용보험제도의성과
4. 고용보험제도의문제점
5. 고용보험제도의개선방향

I. 고용보험제도 개요

I 고용보험 도입 과정

- 1982년에 노동부가 경제기획원에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건의
- 1990년 하반기 제 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
- 1991년 8월에 정부는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고용보험제도 모형 설계 및 제도 시행을 관련 연구 착수
- 1993년 5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을 정부에 제출
- 1993년 12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건의를 토대로 한 고용보험안이 국회에서 통과
-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시행
(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3

I. 고용보험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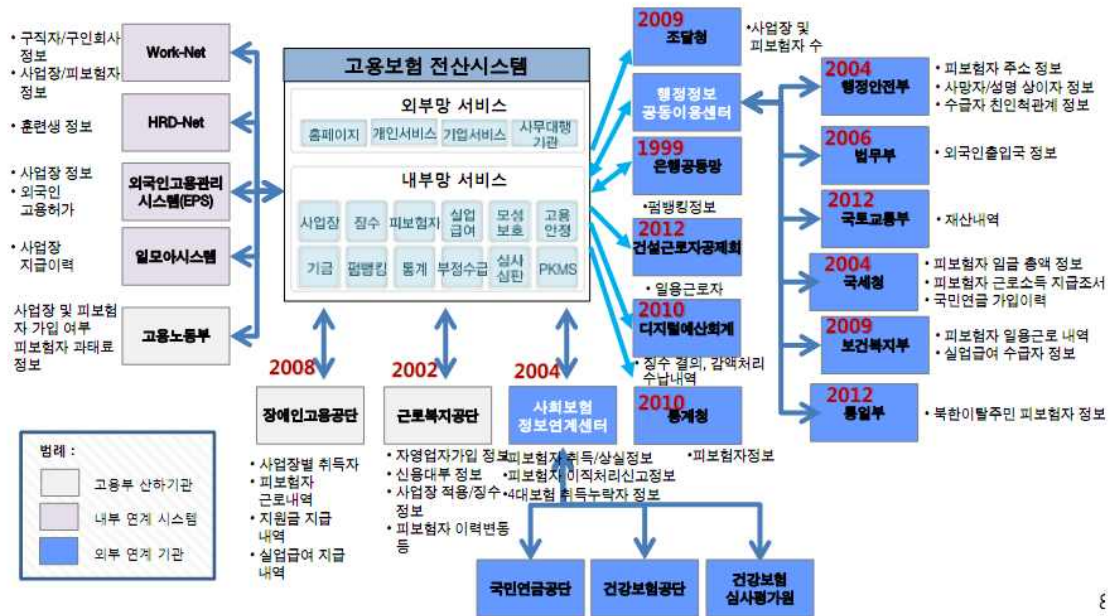
I 고용보험 시행 후 변천과정

- 1995년 7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시행
- 1996년 7월 실업급여 최초 지급
- 1997년 11월 외환위기 발생
- 외환위기 발생 후 1998년 10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최소 피보험고용기간 단축 : 이직 전 18월 중 12월에서 180일로 단축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60~210일 -> 90~240일
- 육아유직급여 및 출사전후휴가급여 신설(2001.11)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용(2004.1)
- 구직급여 대기기간 단축(2004.1): 14일->7일
-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2012.7)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적용(2012.1)

4

I. 고용보험제도 개요

I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



5

I. 고용보험제도 개요

I 고용보험제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

-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
 -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둔 고용보험제도로 설계
 -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고실업시기 대비 제도**
 - 한국도 유럽과 같은 저성장/고실업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대비
- **선진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

II.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I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제도(적극적 노동시장 제도)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구인구직지원)+육아휴직급여로 구성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7

II.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I 강력한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 장치

- 구직자들의 반복실업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180일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도록 함
- 실직자는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하고 1-4주에 1회씩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실업자와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자에게는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엄격한 실업인정 검사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하여 실업급여가 초래할 수 있는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
- 취업촉진수당제도를 마련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조기 재취업 노력을 유인
-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 최장 2년까지 훈련연장급여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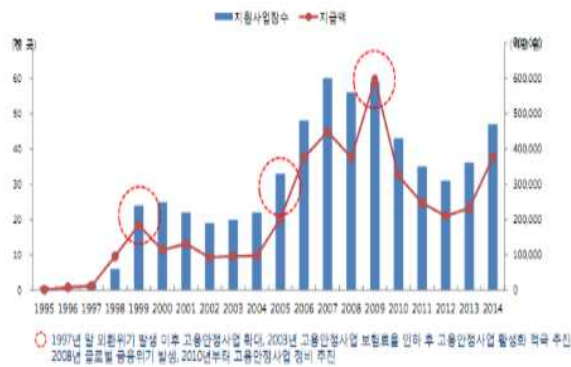
8

Ⅲ.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Ⅰ 외환위기 및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고실업 극복에 기여

-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하반기의 세계금융위기로 고실업에 직면하게 되자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통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활용한 대규모 실업자훈련과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사업을 시행
- 고용보험제도는 안정적인 고용보험기금을 즉각 활용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고용안정사업 지원 사업장 및 지급액 추이>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추이>



Ⅲ.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Ⅰ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체제 정비와 활성화의 계기 마련

-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생산직 기능인력 양성 위주의 직업훈련제도가 근로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체제로 정비되는 계기 마련
- 고용보험법은 기존의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내 직업훈련을 자율화하는 대신 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추이>



III.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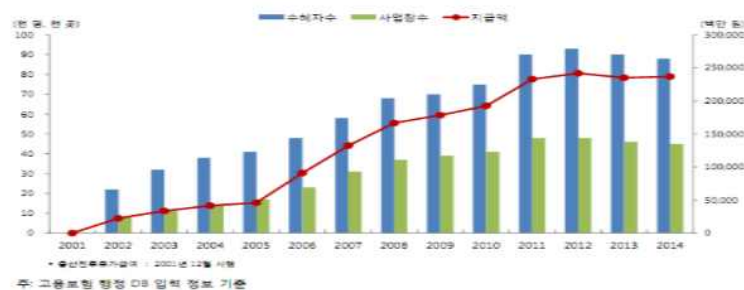
노동시장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공

- 고용보험기금이라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안정화 도모
- 고용보험제도 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실업급여가 포함되어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체계적인 고용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계기 마련

노동시장 인프라의 확충 계기 마련

- 외환위기 직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 신청자가 쇄도하자 고용보험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공공서비스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고용정보망을 발전시키게 됨
- 2005년 이후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시설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공공고용 서비스 기관 구축

<출산전후휴가급여 수혜자, 사업장수, 지급액 추이>



11

IV.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세부제도간 연계 미비

- 고용보험제도 안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아직 미정착
-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까지 평균 35일 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직자의 고용센터에 조기 구직등록, 이직 직후부터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개시, 이직자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실업급여 지급의 연계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노력이 크게 약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한계

-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여 그동안 다양한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고용보험의 보험적 성격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서비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나, 노사는 기금 소진과 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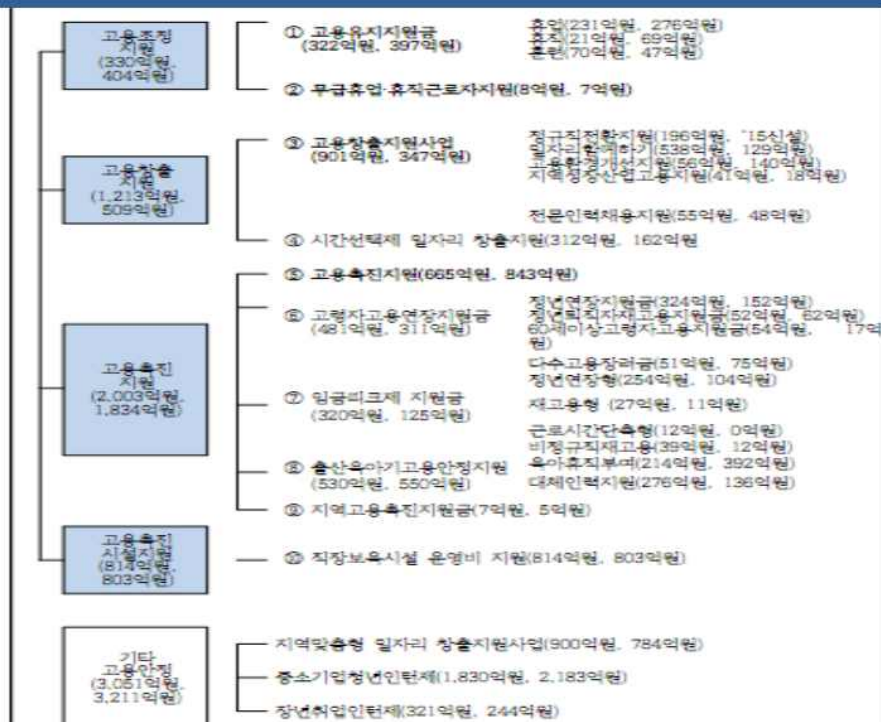
IV.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I 제도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 그동안 노동시장 불안정시마다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의 중복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설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전산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이 도입되었고 (예,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의 목적과 효과의 검증이 불분명한 사업도 다수

13

IV.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자료: 고용노동부(2015), 『고용안정사업 개편 계획』, 내부 자료

14

IV.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한계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43.8%에 불과(2014년 8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가입자는 2014년 8월 현재 14천명만 가입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미흡

- 그동안 지속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의 8% 수준
- 민간과 공공 고용서비스 모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 공공고용서비스의 경우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담당인력의 절대 부족과 전문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
- 직업훈련서비스의 경우, 취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직업훈련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필요

15

IV.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미흡

<실업자 직업훈련 계좌제 취업률 추이>

(단위: 명, %)

	수료인원 (A)	조기취업자 (B)	수료후취업자 (C)	수료후 취업자 취업률 (C/A)	전체 취업자 취업률 (B+C)/A
2010	292,003	7,829	85,018	29.1	31.8
2011	310,331	8,912	112,042	36.1	39.0
2012	252,234	6,742	93,382	37.0	39.7
2013	365,222	8,873	136,741	37.4	39.9
2014	229,639	5,923	89,934	39.2	41.7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15.4.12. 기준.

16

IV.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미흡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별 재정 투자 국제 비교 (GDP=100) >

	프랑스	독일	OECD 평균	한국	미국	일본
전체	0.93	0.79	0.58	0.33	0.14	0.27
직접 일자리 사업	0.14	0.03	0.06	0.19	0.01	0.09
직업능력개발	0.36	0.26	0.15	0.06	0.04	0.03
고용서비스	0.32	0.40	0.26	0.02	0.08	0.05
고용장려금	0.06	0.03	0.12	0.05	0.01	0.09
창업 지원	0.05	0.07	0.02	0.01	0.0	0.0

< 서비스 대상별 공공고용서비스기관 현황 >



17

V.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취업 촉진 기능의 강화

- 고용센터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의 요건만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고용보험 행정업무 중심의 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업과 실업급여는 물론 일반 재정 등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사업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
- 뉴질랜드는 실업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3 이상의 구직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발생 후 1주일 내에 구직자와 소득지원을 받는 사람의 33-40%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고용보험 사업의 재정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순효과가 낮은 고용보조금을 대폭 정비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의 연계 하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취업자/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재구조화
-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

18

V.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I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사례관리적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 강화

-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수많은 공급자 중심의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과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 사업으로 통하여 맞춤형 고용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



19

V.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I 노동시장정책에서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균형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영세자영업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당면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대상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주와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매칭펀드로 조달하는 등 재원을 확충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필요

I 모성보호 사업을 독립 계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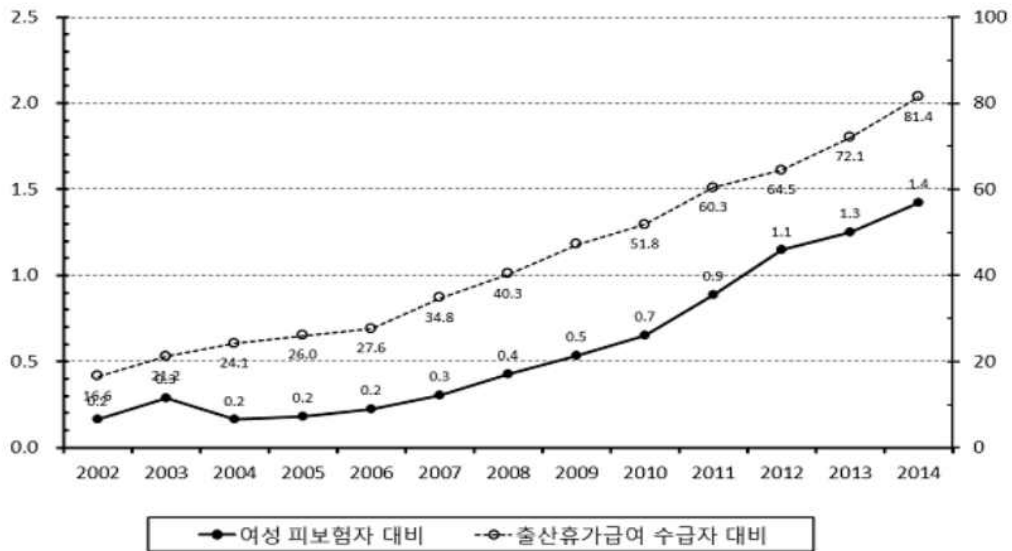
- 현재 실업급여 재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재정에서의 매칭펀드 부담 법제화 또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한 '부모보험'으로 발전 필요

20

V.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육아휴직 급여 추이>

(단위: %)



21

V.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I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으로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적용 확대를 하더라도 사각지대 해소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
-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에서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또한 구직급여 신청요건,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부자격 요건 등의 합리화를 통해 실업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 시간제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 단위 피보험기간 산정 및 부분실업급여제도 도입 필요
-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의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I 고용보험기금 거버넌스 강화

-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거버넌스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지역고용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

22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 서남규 박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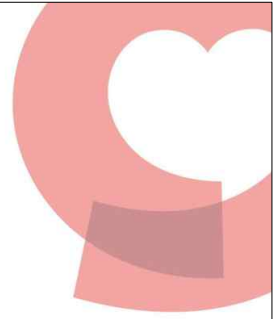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제도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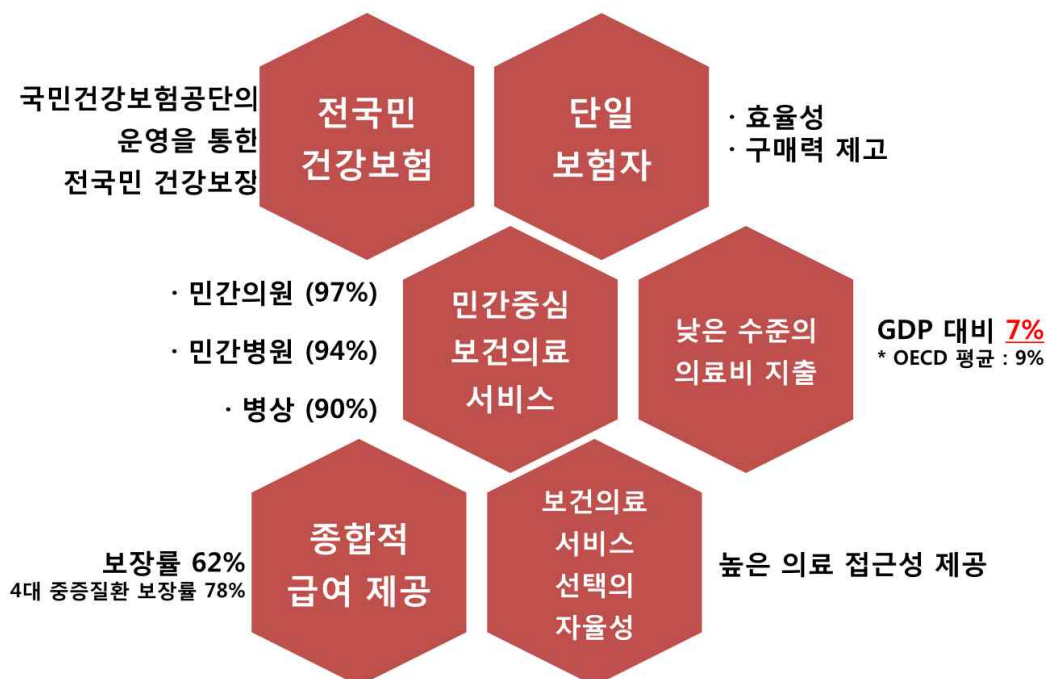
- ① 보건의료체계
- ② 국민건강보험제도
- ③ 건강보험의 성과
- ④ 건강보험의 도전요인 및 과제

NHIS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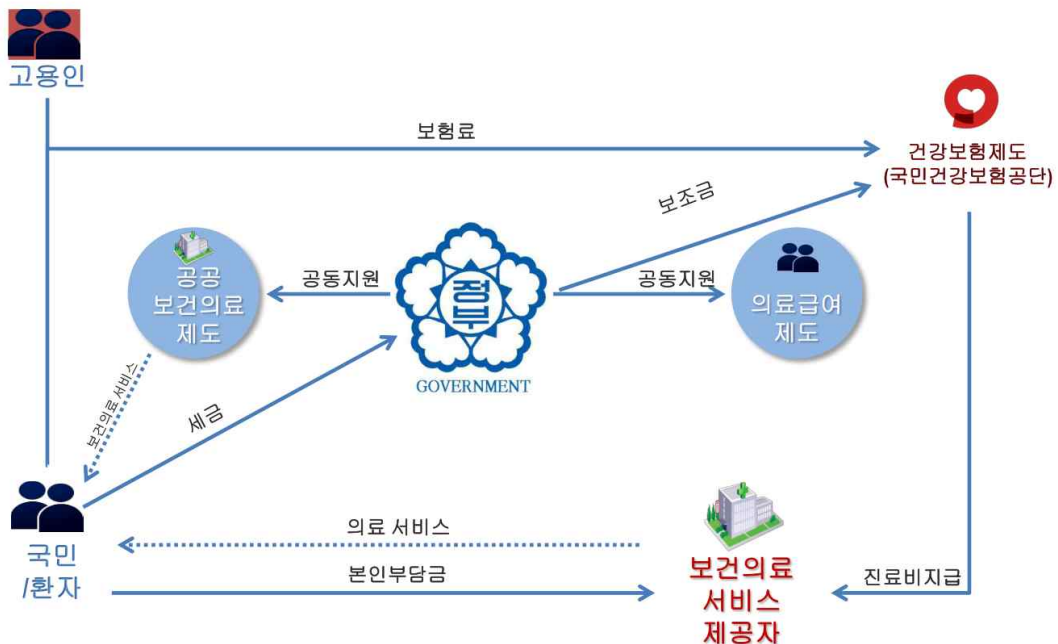


주요 보건의료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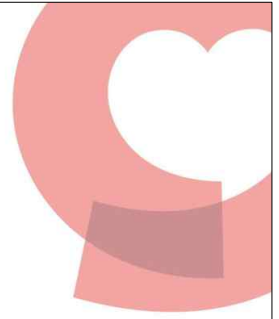
구분	현황	연도
보건의료자원		
활동 의사수(1,000명당)	2.2 / 3.3 (OECD 평균)	2013
총 병상수(1,000명당)	11.0 / 4.8 (OECD 평균)	2013
총 요양기관수	86,810	2014
보건의료이용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일)	16.5 / 7.3 (OECD 평균)	2013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건)	14.6 / 6.7 (OECD 평균)	2013
건강상태		
평균기대수명(세)	81.8 (남성 : 78.5, 여성 : 86.1) / 80.5 (OECD 평균)	2013
영아사망률(1,000명당)	3.0 / 4.1 (OECD 평균)	2013

5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6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사

(197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1988)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9)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2011) 4대사회보험 통합 징수 시행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00)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연도	시기	1인당 국내 총생산 (USD)*	관련 법령 또는 사업
1963 ~1977	의료보험 임의가입제도	142	• 의료보험법 제정 (1963)
		824	• 의료보험법 개정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76)
1977 ~1989	건강보험 조합 - 직장조합 - 지역조합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보장성 확대)	1,042	•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적용 실시 (1977) ※ 5인 이상 사업장 (1988), 1인 이상 사업장 (2003)
		1,764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적용 실시 (1979)
		1,870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 (1981)
		1,971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1982)
		4,571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8)
		5,565	•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9) →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 의료보험 도입 이후 12년만에 달성
2000	국민건강보험	11,347	• 의료보험 통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단일보험자)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19,028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1	통합징수	22,388	• 4대사회보험 통합 징수 시행

* 출처 : OECD, WB(세계은행) 국가 통계

9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의 주요 요인

사회경제적 상황

- 한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 국민의 건강보험 요구 (1987년 대선 공약)

제도설계

- 다 보험자 시스템 (지역 및 직장 별로 비영리단체 운영)
- 낮은 부담(보험료), 급여 및 수가 정책

정책

- 법적 강제 부여 (가입자의 당연 가입 및 공급자의 당연지정제)
- 점진적 확장 (대규모 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으로 점진적 건강보험 적용)
-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 효과적인 운영 지원 (지역 자치단체장의 운영위원회 의장 임명 및 경험있는 직원의 신설조합 배치)

정보통신 기술

-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통한 효율적 운영 (정부의 주민등록제도 등)
- 자격관리, 부과, 징수, 급여관리, 급여 심사 등에 활용

1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강제 가입제도

- 1989년 이후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단일보험자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 민간 요양기관의 높은 점유율에 따라 당연지정제도 시행
- 민간요양기관 점유율 : 94.3% / 민간 의원 점유율 : 97.3% / 병상 점유율 : 90.5%

2013년도 보장성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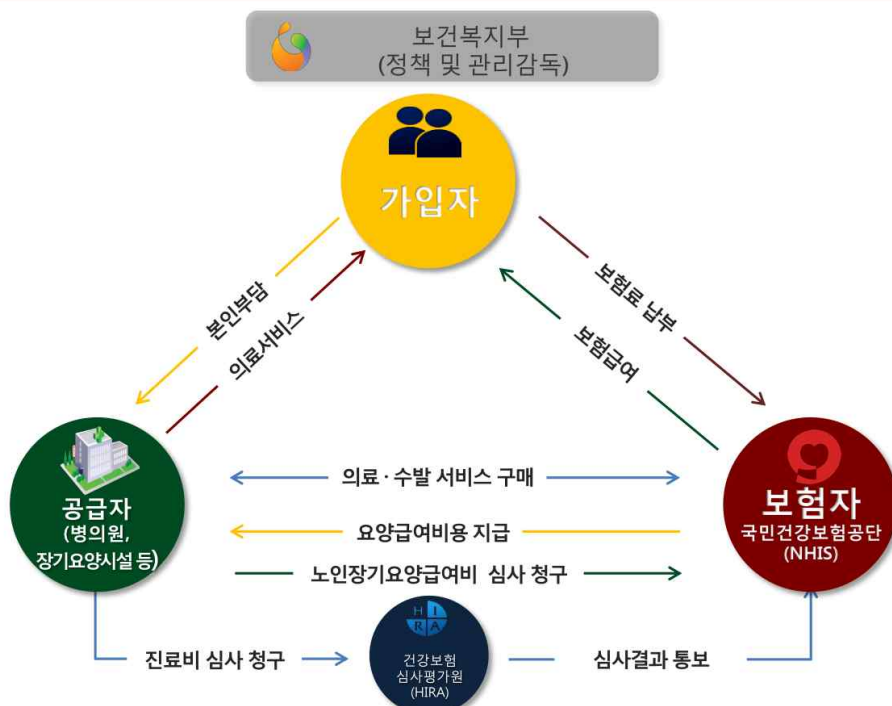
- 국민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제공
- 공단은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화된 건강 예방 및 증진 사업 실시

- 생애주기 별 건강검진 사업
- 검진 사후관리, 마이헬스뱅크, 국민 건강주의 알람서비스

11

국민건강보험의 관리방식(거버넌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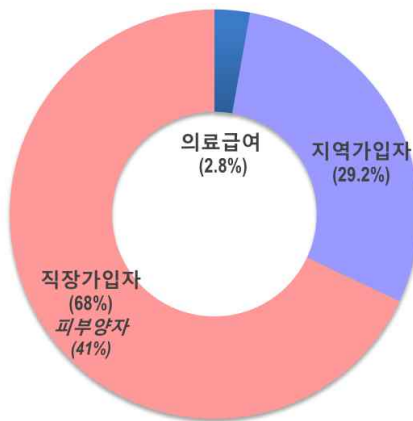
적용인구 현황 및 자원조달체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2013)

전체인구의 약 97.2% (약 5,030만 명)

※ 외국인가입자 포함 : 약 554,000명

의료급여 : 전체인구의 약 2.8% (약 14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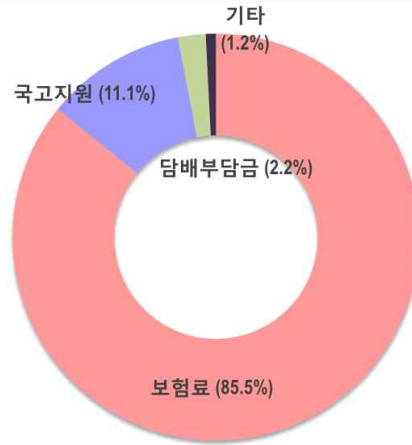


자원조달체계 (2013)

보험료 : 약 38.6조원 (약 340억 USD)

-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안함

정부지원 : 약 6.2조원 (약 50억 USD)



13

보험료 부과체계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

- 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고용주 및 고용인이 각각 50% 부담
- 월 보험료 산정 방식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소득월액 × 보험료율 × 50/100)

● 지역가입자

- 가입자의 소득, 재산, 성별, 연령, 차량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산정 방식 = 보험료 부과 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

※ 부과 점수당 금액 : 175.6원 (2014) → 178원 (2015)

14

진료비 본인부담률

입원진료 : 20%

- 진료비의 20% 본인부담

외래진료 : 30 - 60%

-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이함

약국 : 30%

- 감기 등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상승(40 - 50%)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 5 - 10%

-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낮은 진료비 혜택 제공

희귀·난치성질환(10%) : 혈우병, 만성신부전, 정신질환, 장기이식 환자 등
중증질환(5%) : 암, 심혈관계 질병, 뇌혈관 관계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

15

본인부담액 상한제

비교적 높은 본인부담률 (37.5%)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가중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부터 국민을 보호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상한액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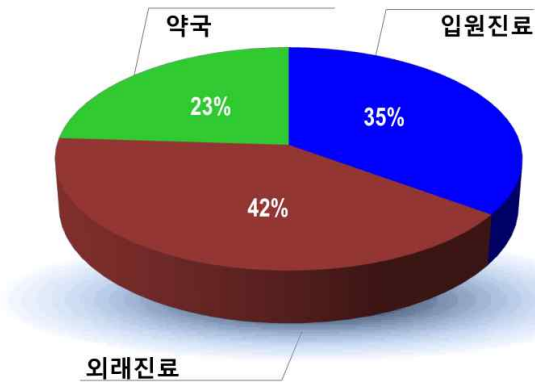
- 보험료 부담수준(가계 소득) 기준을 7단계로 나누어 상한기준 설정

보험료 부담 수준	1 분위	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2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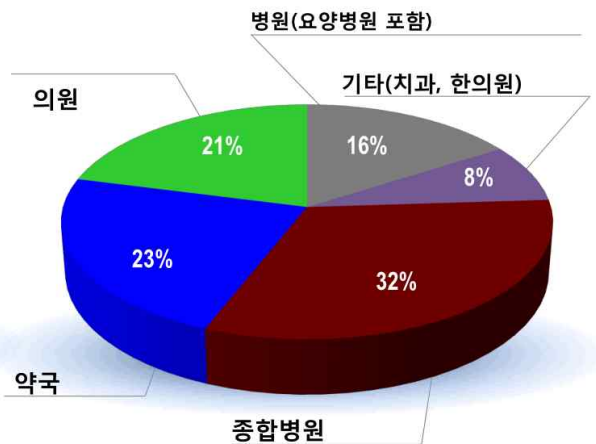
16

건강보험 지출 현황

진료종별 현황 (2013)



요양기관별 현황 (2013)



17

진료비 지불제도(1)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외래 및 입원 등 모든 진료 및 종별 요양기관에 적용 (기타 진료비 지불제도 적용 서비스 제외)

수가 결정 절차

-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 6개의료단체 대표 간 개별 협상 진행
- 협상결렬시 보건복지부(MOH) 장관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HIPDC) 최종 결정
 - ※ HIPDC :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 ※ MOHW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총 진료비 지출 중 지불제도별 비중 (2013)

- 행위별수가제(93.0%), 포괄수가제(2.9%, 신포괄수가제 포함), 일당정액제(4.1%), 성과지불제(0.07%)

18

진료비 지불제도(2)

포괄수가제(DRGs, 7개 질병군)

- 의원 및 병원('12.7.) → 종합병원('13.7.)
- 7개 질병군 : 제왕절개분만,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일당 정액제(Per diem)

- 요양시설, 정신병원

19

국가 건강검진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 6세 이전까지 7차 건강검진 제공
- 기본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 발달평가 및 상담
-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

청소년 건강검진 (6세 ~18세)

학생 대상 건강검진

- 초중고학생 대상
- 기본 건강검진
- 병리검사
- 구강검진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 비학생 대상의 검진
(15세~19세)

일반 건강검진 (19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 기본 건강검진 및 문진
- 흉부 방사선 촬영
- 요검사 및 혈액검사
- 구강검진

암 검진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검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40세 및 66세

※ 청소년 건강검진은 교육부의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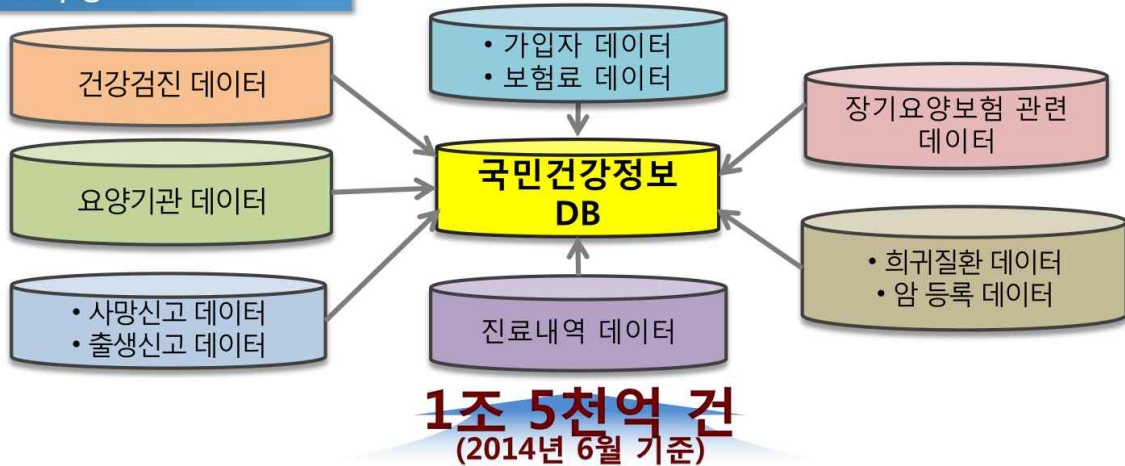
20

국민건강정보 DB(NHID) 구축

목적

-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
 -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증거기반의 보건정책 마련

DB 구성



21

건강 증진 및 예방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관리

- 건강검진 수진자 사후관리
 - 대사증후군맞춤정보 서비스 제공
 - 대사증후군맞춤정보를 텔레케어, 우편, 등으로 제공 및 의료기기(혈압계, 혈당계) 대여



나의 건강정보

- 온라인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
 - 개인 건강 기록, 건강 위험도 측정, 대사증후군 맞춤정보, 뇌졸중 위험 예측프로그램, 비만 개선 프로그램 제공

국민건강주의 알람 서비스

- 국민건강정보 DB 및 소셜미디어정보(SNS)에 의한 질병 예측 및 주의 예보
 - 감기(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피부염 등 질병발생 위험 제보

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 제공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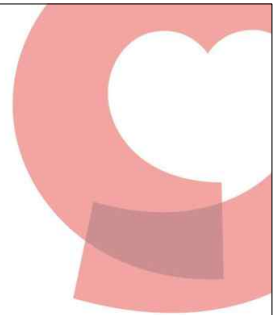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성

- 2014년 기준 적용 인구는 약 40만명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 등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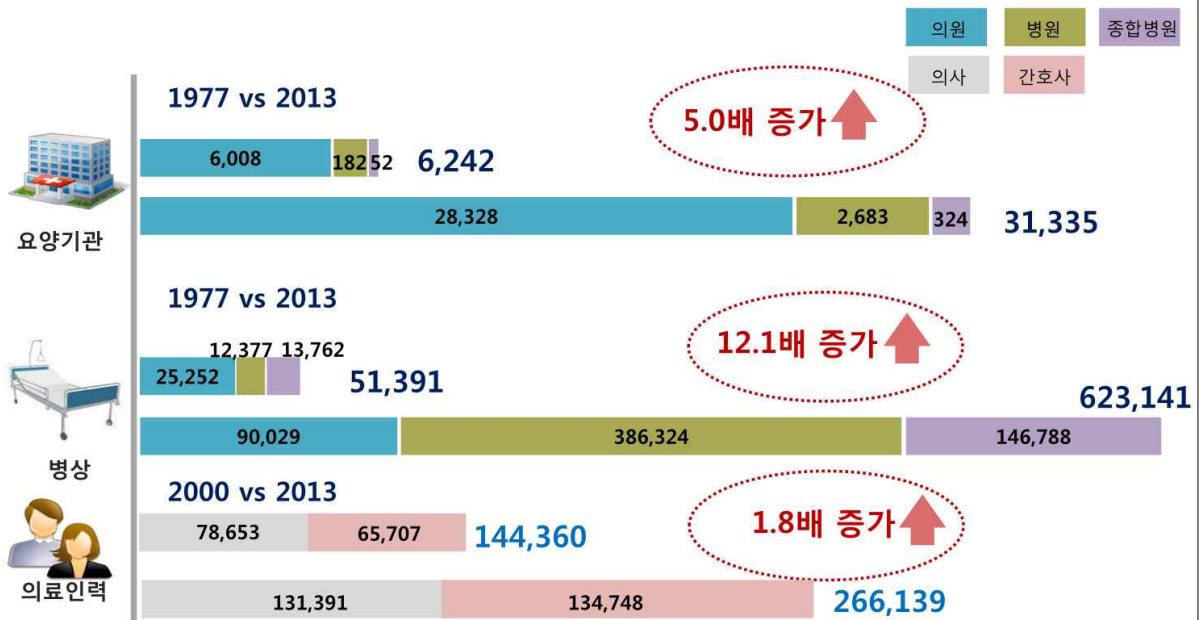
- 2014년도 고객만족도 89.1% 달성
-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

23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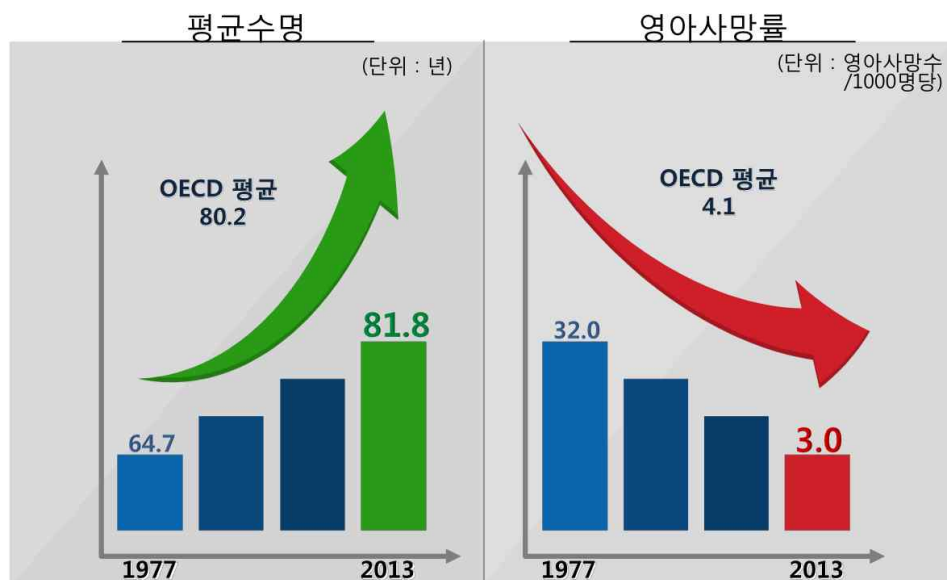
의료자원 확충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2013), 보건사회 통계연보(1978)

25

국민건강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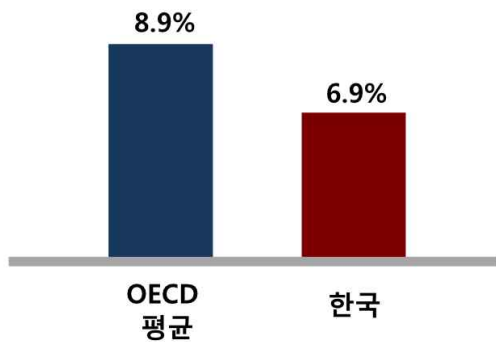
※ 출처 : OECD 보건데이터(2014), 보건사회 통계연보(1978)

26

의료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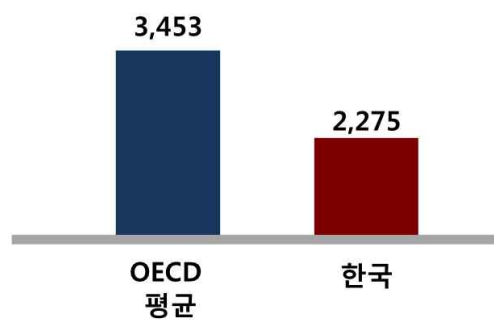
● 국민 총 의료비 지출

(단위 : GDP대비 %, 2013)



●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USD, 구매력평가기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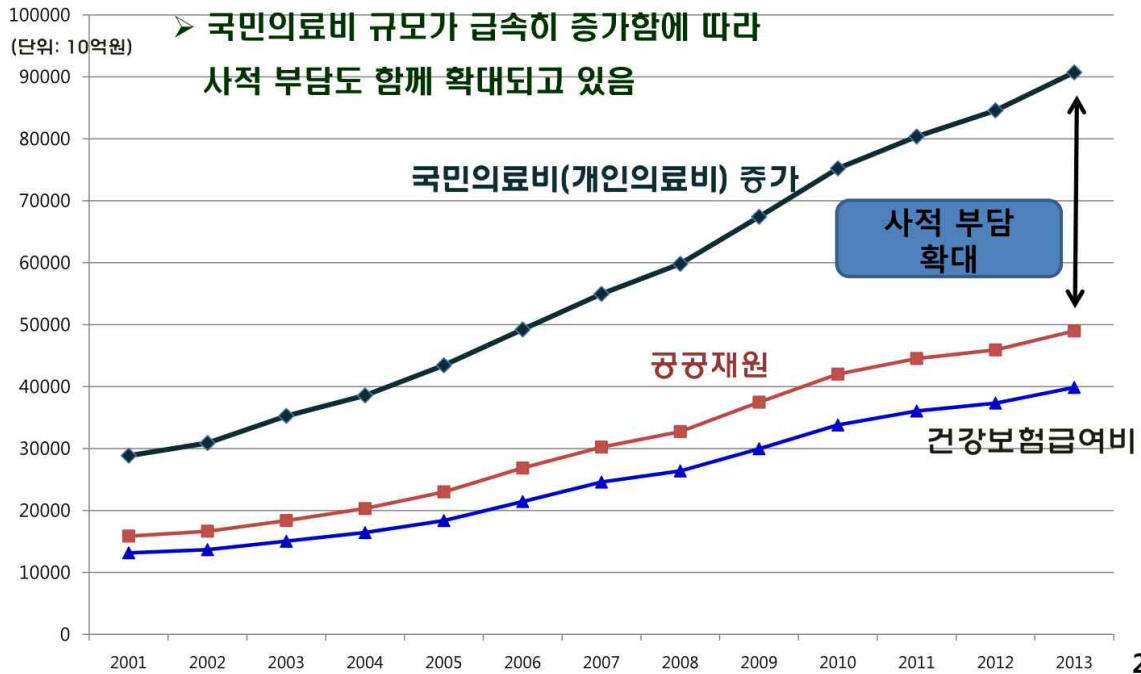


※ 출처 : OECD 보건데이터, 201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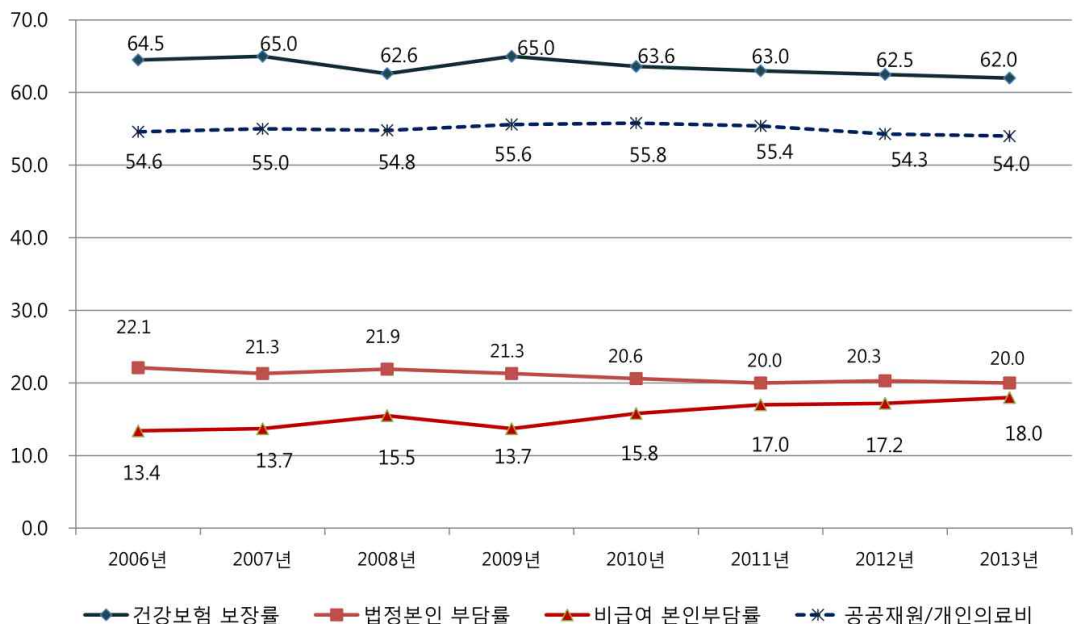
건강보험의 도전요인 및 과제

가계부담 의료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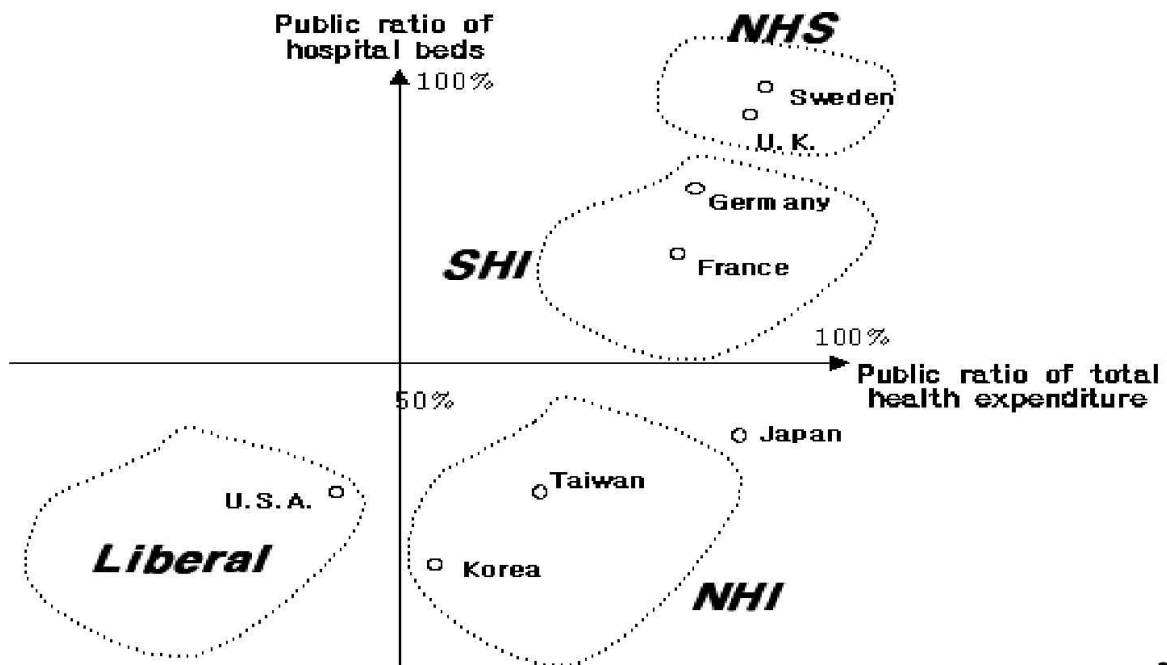


가계부담 의료비의 증가

➤ 건강보험보장을 정체의 주 원인은 비급여진료비의 증가에 있음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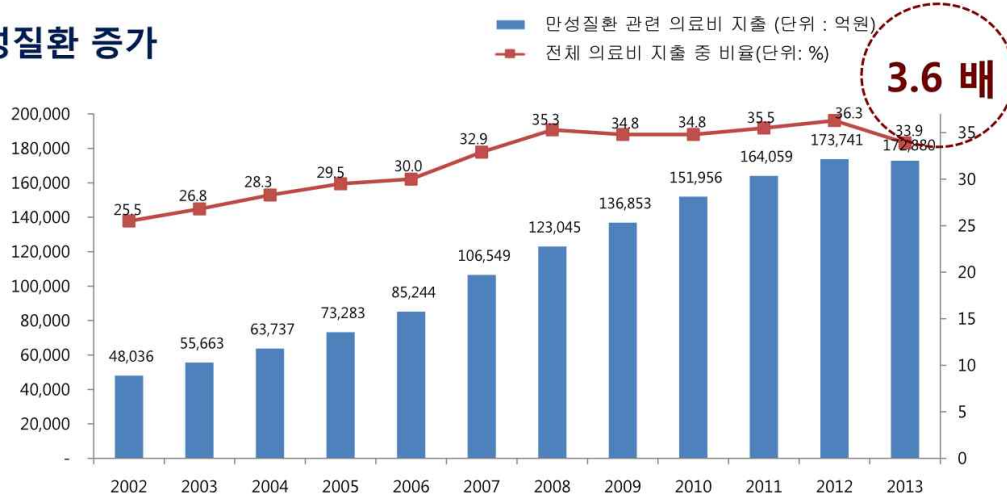
31

도전요인

-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협 우려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국민의 서비스 향상 요구

만성질환 증가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32

도전과제



33



NHIS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